



건설협회 도회 운영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5일 춘천시 동면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협회 및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외 홍보·손님맞이 준비 평창올림픽 성공 필수 요소

올림픽 추경 필요한 이유는

도가 추경에 요청한 평창동계 올림픽 관련 677억원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이다.

대회가 불과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내외 열기 확산과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하지만 정부안에 해당 예산이 모두 빠져 올림픽 준비와 전국적인 불임 확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도가 요청한 예산은 올림픽 개최지 도시경관 개선(50억원), 국내외 홍보(273억원), 문화올림픽 추진(172억원), 관광객 맞이 속식시설 개선(39억원), 미등록 기자 미디어센터 운영(12억원), 올림픽 서포터즈·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 지원(37억원), 환경올림픽 위한 정선 알파인경기장 녹화(7억 7,000만원), 올림픽 연계 쇼핑센터 운영(85억원) 등이다.

지난해 2017년도 정부 당초예산 편성 당시 신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던 예산이 대부분이다. 국

내외 관심도, 흥행 여부가 대회 성공 개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사실상 올림픽 성적표가 결정되는 셈이다.

도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를 위한 것인 만큼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막상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새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국정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허탈감도 크다. 도는 일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림픽 예산 반영을 위해 여야를 상대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을 통한 올림픽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기금을 통한 일부 예산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올림픽이 국가대사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예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대한건설협회 도회 운영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는 5일 오전 도회 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대표회원 선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추경 포함이 성공개최 관건” 정치권 예산 살리기 주목

추경안 올림픽 예산 제외 가능성
도 국회의원, 상임위별 역할 최선
도, 관계부처 설득·당위성 피력

정부가 제출할 6월 추경안에 평창동계 올림픽 관련 예산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 차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평창동계 올림픽이 내년 2월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12월까지 손님맞이 등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2018년 당초 예산에 올

도가 요청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주요 사업

국내외 홍보비	270억원
문화올림픽 분업	170억원
도시경관 정비	50억원
손님맞이 숙식시설 개선	38억 5000만원



림픽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편성 효과는 무의미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추가 추경편성 여부가 성공개최의 관건이 될 것이라 분석이다.

도 국회의원들은 일단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올림픽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림픽 관련 추경의 상당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예결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민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엄

동열 의원은 “올림픽 예산의 경우 도종환 문화부 장관 후보자, 유은혜 여당 간사 모두 공감은 하고 있다”며 “최대한 상의하고 관련 예산편성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는 오는 8일부터 국회 예결특위에서 활동할 도출신 김기선·송기현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김 의원은 “올림픽 예산의 경우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함께 심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는 게 추경 목적에 맞지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올림픽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자리와 올림픽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의 공조체계 구축도 필수다. 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당 차원에서 힘을 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일단 오는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올림픽 관련 예산을 담기 위해 관계부처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민수